李 "AI 사회로 대전환…27조 지출 삭감·모든 내역 공개"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광역별 피지컬 AI 거점 조성·전문 인력 양성 재난 예방·신속 대응, 아동수당 8세 이하로 확대…APEC 성과 소개도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정부는 2026년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했고 AI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 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 산안과 관련해 주요 편성 방향과 정책적 필요성을 설명하고, 신속한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여야에 당 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과 관련해 'AI 사회 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 라면서 "저성과·저효율 지출을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지출을 삭감하였고, 모든 내역 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께서 제대로 감시하고 주 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2026년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며 "AI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말했다.

이 대통령이 밝힌 내년 내년 예산안의 중점 방향은 'AI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 'AI 3 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 1000억원을 편성 등이다.

이는 올해 예산 3조3000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 난 규모다. 이 가운데 2조6000억원은 산업·생활·공 공전 분야 AI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대통령은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해 중점 사업에 집중투자하겠다"며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향후 5년간 6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예산으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 컬 AI 지역거점을 광역별로 조성하고, 대규모 R& D·실증 추진을 통해 AI 기반 지역 혁신을 촉진하 겠다"고 덧붙였다.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 개의 신속한 AI 적용을 지원하고, 복지·고용, 납 세, 신약심사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AI 도입도 느리다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인재 1만 1000명을 양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 나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밖에도 재해·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에 전년 대비 1조8000억원을 증액한 총 5조5000억원을 편성했고, 출생률 반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 령을 만 7세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 고,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늘려 나간다.

한편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최초로 AI 와 저출생·고령화 등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도 전과제를 함께 풀어가기로 합의했고, 문화창조산 업을 APEC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K-컬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 하게 다지고,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한중관 계를 전면 회복하고, 실용과 상생의 길로 다시 함 께 나아가기로 했다"고 외교적 성과도 소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규탄하며 불참한 채 본회의장 밖에서 침묵시위를 벌였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힘 장동혁 대표, 내일 광주 5·18 묘지 참배

호남 정례 방문 선언 후 첫 행보…더현대광주 부지 등도 방문

국민의힘 장동혁〈사진〉 당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는다.

4일 국민의힘 광주시당에 따르면 장 대표는 6일 5·18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다. 이어 북구 임동 더현대광주 예정 부지와 참단3지구 국가 AI 데이터센터를 잇달아 방문하다

장 대표의 광주방문은 보수 정당 대표의 호남 정 례 방문을 선언한 첫 행보다.

당은 '매달 장동혁이 호남과 함께 합니다(월간 호남)' '매달 장동혁이 호남을 찾아갑니다(국민통 합 정기배송)'라는 구호를 내걸고 지역 민심과의 접점을 넓힐 계획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5·18 4단체 와 간담회를 진행한 뒤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 한다. 이후 오후 3시에는 북구 임동 일대 더현대광 주 종합쇼핑몰 예정지 현장을 확인하고, 북구 오 룡동 1083 국가 AI 데이터센터를 찾아 디지털 인 프라와 지역 연계 전략을 점검할 계획이다.

장 대표의 광주방문에는 국힘 지도부도 총출동한다. 최고위원과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안태욱 광주시당 위원장, 광주 지역 당협위원장이 동행한다. 국힘당 지도부는 이번 광주 방문을 기점으로 '월 단위 호남 일정'을 정례화한다는 계획이다. 단 발성 방문을 넘어 현안 점검 과 후속 협의를 반복하는 구 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지역사회와의 접촉면을 넓 히고 정책 성과를 축적하겠 다는 구상이다.

안태욱 국힘 광주시당 위 원장은 "정기 방문은 구호

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과제를 챙기는 과 정 자체가 통합의 출발점"이라면서 "장동혁 당대 표의 광주 방문은 호남 정기 방문을 통해 국민통합 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호남과 수도권에서 당 지 지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모이가 대한 것 이디고 할겠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옛 전남도청 '보도검열관실' 복원 시급"

민형배, 문체부 국감서 촉구…광주·전남언론인회 환영 성명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언론 통제 상징이었던 옛 전남도청 내 '보도검열관실' 복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광산을)의원은 최근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최휘영 장관에게 "옛 전남도 청 복원 사업에서 핵심 공간인 보도검열관실이 누 락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조속한 복원을 촉구 하다

민 의원은 질의에서 "보도검열관실은 5·18 당시 신군부가 언론을 장악하고 광주의 진실을 은폐·왜 곡했던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유적지"라고 강조 했다. 그는 "이 공간은 단순한 사무실이 아니라 5· 18의 발단 중 하나였던 진실 보도 통제와 왜곡 보 도 조장이 이뤄진 핵심 현장"이라며 "광주지역 언 론인들 또한 이곳의 복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언론인회는 민 의원의 보도검열관실 복원 촉구에 대해 환영 성명을 내고 "문체부가 보 도검열관실의 복원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최초 기초조사에서 이러한 공간이 있었다는 사실마저 파악하지 못한 날림작업을 바탕으로 복원사업을 착수한 바람에,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되자 회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갖게 한다" 면서 "이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옛 전남도청을 복 원하면서 세금만 축내고, 법을 기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국민을 대리해 복원 문제 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덧붙 연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힘, '추경호 영장' 항의 시정연설 보이콧

국민의힘은 4일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며,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통령이 22분간 연설하는 동안 모두 33차례 박수를 쏟아내며 호응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색 마스크와 넥타이에 어 두운색 정장을 입었고, 기슴에는 '자유민주주의' 가 적힌 근조 리본을 달고 항의했다.

이 대통령이 로텐더홀 입구에 도착하자 일부 의

원들은 "범죄자 왔다. 범죄자", "꺼져라", "재판받 으세요"라고 외쳤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동안 비공개 의원총회를 진행한 뒤 국민의힘 의원 일동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치졸한 야당탄압 정 치보복과 특검의 야당 말살 내란 몰이 목적의 무리 한 정치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작년 12월 3 일 밤 국민의힘 107명 의원 누구도 의총 공지 문자 메시지로 표결을 포기하거나 방해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을 국민 앞에 증언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의결정족수가 채워졌음에도 이 대통 령이 본회의장에 들어올 때까지 표결을 미룬 우원 식 국회의장을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수사해 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것과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 유튜버에게 설 선물을 보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도 정치 보복성이라고 규탄했다.

/오광록 기자 kroh kwangju.co.kr@·연합뉴스

